

# 광주트라우마센터-5·18조사위 “5·18 진상규명 위해 힘 모은다”

### 피해자 심리 지원, 성폭력사건 진상조사 활동 등 협력

국내 첫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기관인 광주트라우마센터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5·18 진상규명을 위해 손을 맞잡는다.

광주트라우마센터와 5·18조사위는 5일 오전 센터에서 명지원 센터장, 송선태 5·18조사위원장, 광주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폭력 치유 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진상규명 조사가 지난 40년 동안 밝혀지지 않은 5·18 진상규명의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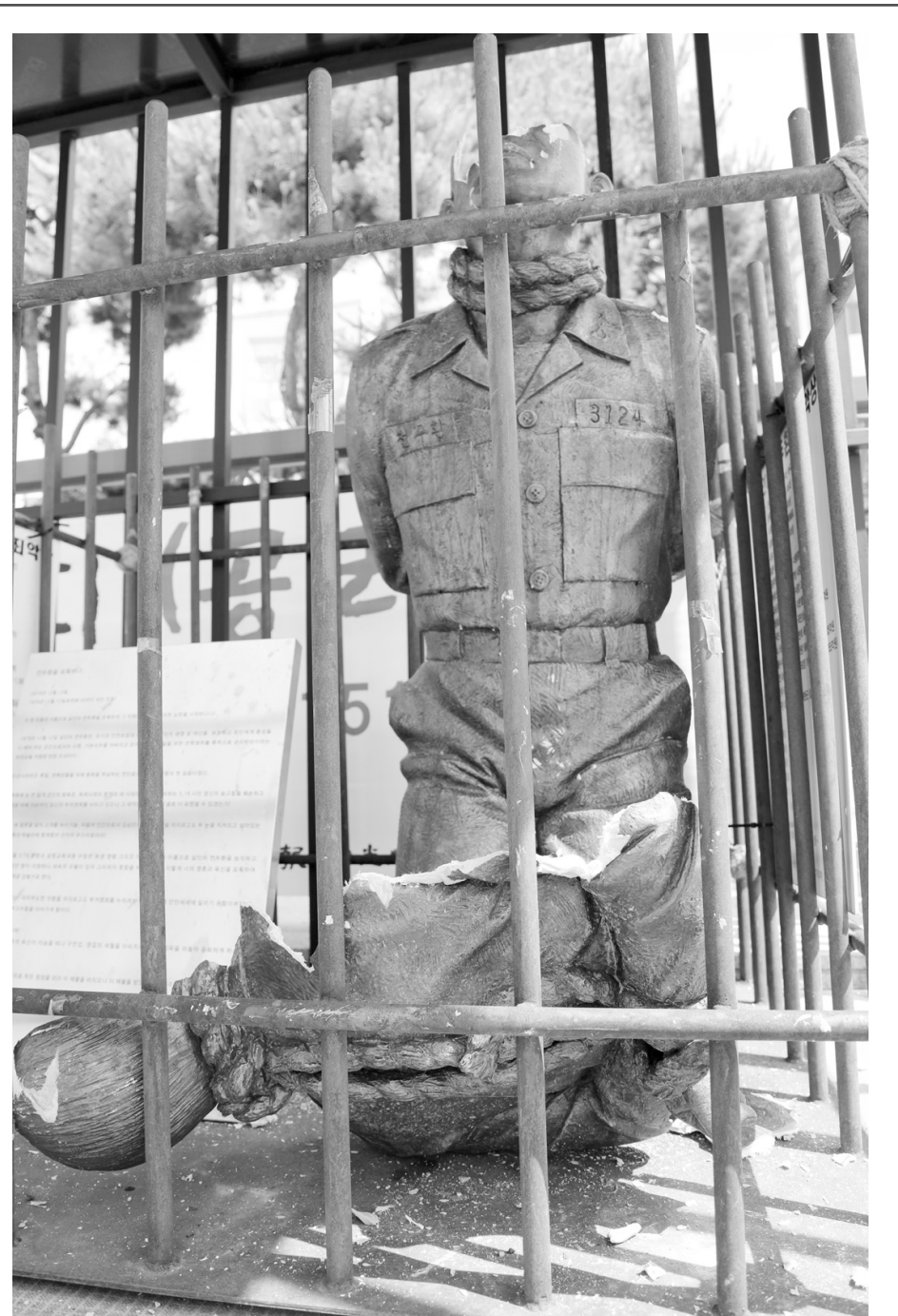
지막 기회라는 점과 양 기관의 협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해 성사됐다.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국가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심리지원에 공동으로 나선다.

조사 범위에 포함된 사건의 피해자 신고를 독려하고,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성폭력 사건의 진상 조사 활동 협력, 조사 참여 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 5·18조사위 조사관의 대외의상과 소진예방 위한 심리지원 등을 협력해 추진한다.

이명순 시 평화기반조성과정장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조건일 뿐 아니라 진상 규명을 통해 개인의 치유와 공동체의 치유도 가능할 것”이라며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진상 규명 노력에 광주시도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트라우마센터는 국내 최초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재활센터로 2012년부터 현재까지 590여명의 국가폭력 생존자를 대상으로 심리교육, 상담 등 다양한 치유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행안부 시범사업으로 채택돼 운영 중이다.

조인호 기자



## 두 동강 난 ‘전두환 동상’ 딜레마

### “흉물스럽다” 민원에 “피손 자체가 상징…준치해야” 대두

‘무릎꿇은 전두환’ 동상이 심하게 파손되면서 도심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동상을 치위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광주시와 5·18 단체는 ‘전두환 조형물’ 처리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 설치된 ‘무릎꿇은 전두환’ 동상이 심하게 파손됐다. 분노한 시민들의 못매에 지난날 쫓 동상 머리 부분에 금이 갔고 이후 그대로 전시를 이어오던 열마전 열굴 부분과 등 뒷부분이 떨어져 나갔다.

일부 시민들이 5·18민주광장 한복판에 동상 얼굴이 심하게 파손된 채 방치되는 것이 ‘흉물스럽다’며 광주시에 이를 해결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조형물의 복원 여부는 5·18단체와 동상 소유주가 결정할 문제다. 다만 해당 조형물이 설치될 때 민주광장 사용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5·18단체에 동상 철거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18단체 관계자는 “5월단체 내에

서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라며 “분노 표출 방법으로 동상을 뺐망치로 때리도록 했는데 분노로 깨진 동상을 왜 굳이 복원하느냐는 의견이 있는 반면 당초 의도한대로 동상이 제 기능을 못하는데 복원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민들은 ‘동상의 상징성을 고려하면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옛 전남도청 관람객 김모씨(37)는 “깨진 전두환 동상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미완의 과제를 암시하는 것 같다. 어떻게 보면 파손된 동상 자체가 시민들의 분노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동구에 거주하는 이모씨(55)는 “굳이 돈을 들여 전두환 동상을 고쳐야 하나 싶기도하다”는 현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에서 5·18투어를 위해 광주를 찾은 김혜미씨(27·여)는 “누군가에게는 흉물일 수 있어도 누군가에게는 이대로 좋은 본보기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 광주 지방의원, 배우자 회사에 구청 수의계약 몰아줘

### 민광주시당, 광주 북구의원 윤리심판원 회부 해당 지자체 공무원노조 “의원직 사퇴” 촉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4일 부적절한 수의계약으로 물의를 빚은 광주 북구의원 A의원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당은 “당 소속 선출직공직자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시민께 심려를 끼쳐 유감을 표한다”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 청원서를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북구지부도 성명을 통해 “A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수의계약을 따내기 위해 계획적으로 업체를 설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

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의회사무국이 상임위 제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원들로부터 받은 ‘입찰 및 계약체결 사업자 현황’에 A의원은 이 업체가 아닌 또 다른 업체를 등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공직자로서 마땅히 준수해야 할 청렴의 의무를 저버리고 부당하게 이권을 개입한 행태는 구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비리와 불법으로 구정을 혼탁하게 한다”며 “A의원은 모든 윤리적, 법적,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A의원은 지난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배우자 명의 업체를 경직 신고하지 않고 북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11건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지역 내 기타 인쇄물 출판업 등으로 사업 홍보물 제작과 간판 설치 등을 진행하는 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금액은 제작·공사 규모에 따라 최소 100여만원부터 최대 1800여만원까지 총 6770여만원에 달한다.

지방계약법상 지방의회 위원의 배우자가 사업자일 경우 해당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또 A의원은 경직 신고 때 배우자가 신규 법인을 운영하는 사실을 알려야 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신봉우 기자

## ‘보조금 부당 수령’ 사립유치원 운영비 회수 정당

광주지법, “교육청 감사처분 정당”

광주시교육청의 감사처분에 불복해 사립유치원 11곳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염기창)는 4일 사립유치원 11곳이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 요구 취소 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11곳의 유치원이 제기한 징계취소에는 각하 결정을 내렸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각하는 무형이나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요건 미비 등으로 수사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처리하

는 절차다.

재판부는 광주시교육청의 감사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교육청은 소송을 제기한 11곳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벌여 모두 원비 보고액을 초과해 우유비나 졸업앨범비, 현장학습비 등을 현금 또는 업체계좌로 징수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유치원에 원장 등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수익원 상당의 금액을 회수 및 반환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은 광주시교육청의 처분 요구가 행정절차법을 위반했고, 학급운영비 회수가 위법한 처분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 때 이른 장마 오나? 남부 해상 정체전선

기상청이 3일 밤 9시경 일기도를 분석한 결과, 제주 남부 해상에 머물고 있는 정체전선이 우리 내륙과 서쪽으로 북상 때 대기가 영향을 받아 올여름 때 이른 장마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4일 밝혔다.

중기예보상 평년보다 약 10일쯤 빨리 장마철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2019년은 6월26일경 장마가 시작됐고, 2018년에도 같은 날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평년의 경우 중부 6월 24-25일, 남부 같은달 23일 시작했던 장마에 비해서도 빠르다.

**ND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